

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12.12)

1. 일본기업 자산매각 및 일본 정부 제재 가능성 관련

□ [일본 정부 동향]¹⁾

-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10일 '문예춘추'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기업들의 자산 현금화가 실행된다면 한국에 금융 제재 등을 할 수 있다고 발언
- 일본 부총리는 현재 당면한 최대 현안은 한국과의 관계이며, 문제는 한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보다도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자세라고 주장
-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하여 일본은 한국에 무상 3억달러, 유상 2억달러의 경제지원을 실시한 결과 한국은 '한강의 기적'이라는 경제 발전을 이루었는데, 그것을 이제 와서 '없던 일'로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발언
- 또한 만일 한국 측이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압류하고 있는 일본 민간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, 일본으로서는 (극단적인 예로 들자면)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, 금융 제재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함.
- 그에 더해 "일본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지는 것은 틀림없다.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"고 발언
- "이웃나라이기 때문에 한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"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"이웃나라와는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마련"이라고도 함.

1) 「麻生太郎副総理が激白 「安倍総理よ、改憲へ四選の覚悟を」」, 『文藝春秋』 2020年1月号, 2019.12.10